

전남 바다는 지금 '주차 전쟁 중'

요·보트 해양레저 수요 폭증
도내 조정면허자 '전국 3위'
정박지 4곳 포화·노후 심각
"성장동력, 인프라 확충시급"

전남지역 요·보트 정박지가 포화상태에 이른 데다 시설 노후화도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 생활수준 향상과 여가시간 증대로 해양 레저관광 수요가 날로 증가하고 있고, 전남도 역시 마리아나 등 해양관광 활성화를 전명한 상황에서 이를 뒷받침할 인프라 확충과 개선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23일 해양수산부와 전남도 등에 따르면 요·보트를 포함한 국내 동력 해양레저기구 등록 건수는 지난해 기준 3만5,000대를 넘어섰다. 해양레저기구는 1년에 3,000대 가량 신규등록되는 등 가파르게 증가하는 추세다.

요·보트 운항을 위한 면허인 조종면허자 신규등록 인원도 전남의 경우 2000년 244명에서 2005년 976명, 2010년 1,494명, 2015년 1,326명, 2020년 2,246명으로 20년간 총 2만8,192명에 달한다. 이는 전국에서 3번째로 높은 수준이다.

이처럼 요·보트와 수요층들이 매년 증가하고 있는 것과는 달리 전남에 위치한 정박지는 이미 포화상태에 이르렀다.

현재 전남에 조성된 요·보트 정박지는 목포 1곳, 여수 2곳, 보성 1곳 등 모두 4곳으로 총 281척(해상 116척, 육상 165척)을 계류할 수 있다.

이중 목포 삼학도 요트마리나는 지난 2009년 사업비 70억원(국비 35억원, 지방비 35억원)을 들여 준공했다. 현재 세한대 산학협력단이 위탁운영 중으로 해상계류 32척, 육상계류 25척 등 총 57척 규모다.

여수시 소호동 여수요트경기장은 지난 1987년 사업비 16억원(국비 7억원, 지방비 9억원)을 투입, 50척 규모의 육상계류시설을 갖췄다.

같은 지역 이순신마리나는 사업비 136억원(국비 25억2,000만원, 지방비 110억8,000만원)을 소요해 2016년에 준공했다. 이곳은 현재

대한이앤씨가 위탁 운영중으로 해상계류 60척, 육상계류 90척이다.

가장 최근 준공돼 보성요트협회가 위탁 운영 중인 보성 비봉마리나는 2017년 사업비 70억원(국비 35억원, 지방비 35억원)을 들였지만, 해상계류 24척이 전부다.

요·보트 정박지들이 수용 선적을 감당하지 못하면서 '바다 위 주차전쟁'을 벌여야 하는 선주들의 원성도 빗발치고 있다.

여수에 정박중인 선주 A씨는 "전남에 있는 정박지는 이미 몇 년 전부터 꽉 들어차 선적을 배정받기 위해 6개월에서 길게는 1년 이상을 기다리는 선주들이 많다"며 "일부 타 지역에서는 웃돈을 주고 선적을 거래하는 경우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여수의 한 요트마리나 관계자는 "추가 정박문의 전화가 매일 10여통 걸려오지만, 자리가 없어 '죄송하다'는 말만 한다"며 "전남지역 말고도 타 지역도 비슷한 처지에 놓여있다"고 말했다.

여기에 목포 삼학도 요트마리나 등 일부 시설은 노후화까지 겹쳐 자칫 대형 사고로 이어질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목포에 정박중인 선주 B씨는 "방파제가 없다 보니 지나다니는 어선들의 파도로 인해 요트와 부잔교가 부딪쳐 폰툰(pontoon)이 망가진 곳이 많다"며 "10년 이상된 노후 시설들이 태풍 등 자연재해로부터 요트피해를 막을 수 있을지, 자칫 대형사고가 나지 않을지 걱정이다"고 지적했다.

이에 요·보트 관련 단체들은 수요에 맞춘 정박 시설 확충을 서둘러야 한다는 목소리를 내고 있다.

전남요트협회 관계자는 "요트 산업은 천혜의 자연여건을 갖춘 전남의 미래 성장동력으로 과감한 투자가 필요하다"며 "바다의 주차장'인 요트정박지를 크게 늘려야 요트를 사겠다는 사람도 늘고, 국내 산업도 발전하는 선순환 구조가 형성된다"고 주장했다.

전남도 관계자는 "마리나항만 개발사업이 정부 국정과제에 반영된 만큼 정부에 거점형 마리나 1곳 조성, 소규모 계류장 10개소 설치안을 건의할 계획이다"며 "전남에 위치한 정박지를 전체적으로 점검할 방안을 찾아 개선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임채민 기자



수능 첫 단추 '3월 학평'

2024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대비 첫 모의고사인 3월 전국연합학력평가가 실시된 23일 오전 광주 경신고교 3학년 학생들이 신중하게 문제를 풀고 있다. >관련기사 6면 /김태규 기자

'과잉쌀 의무매입' 양곡관리법 국회 통과

'대통령 거부권' 행사 주목

초과 생산된 쌀의 정부 매입을 의무화하는 양곡관리법 개정안이 2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양곡관리법 개정안은 이날 오후 국회 본회의

에서 재석 266명 중 찬성 169명, 반대 90명, 기권 7명으로 가결됐다.

양곡관리법 개정안은 쌀 수요 대비 초과 생산량이 3-5%이거나 쌀값이 전년 대비 5-8% 하락할 때 정부가 초과 생산량을 전량 매입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더불어민주당은 쌀값 안정화를 내세워 본회의 직회부 등 이 법안을 강력히 밀어붙여왔지만, 정부·여당은 매입 비용 부담 및 농업 경쟁력 저하 등 부작용을 지적하며 반대해왔다.

야당이 수적 우위를 앞세워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본회의에서 가결시키면서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재의요구권) 행사 여부가 주목된다. /서울=강병운 기자

현재, 법무부·검찰 '검수완박' 청구 각하

개정법률 효력 유지

더불어민주당의 주도로 지난해 성사된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입법이 검사의 권한을 침해하지 않았으며 개정 법률은 유효하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관련기사 5면
현재는 또 국회 입법 과정에서 당시 법제사법위원장이 국민의힘 의원들의 심의·표결권을

침해했다면서도 법사위원장과 국회의장의 법률 가결 선포 행위는 무효가 아니라고 판단했다. 현재는 23일 한동훈 법무부 장관과 검사 6명이 국회의장을 상대로 낸 권한쟁의 심판청구를 재판관 5대4 의견으로 각하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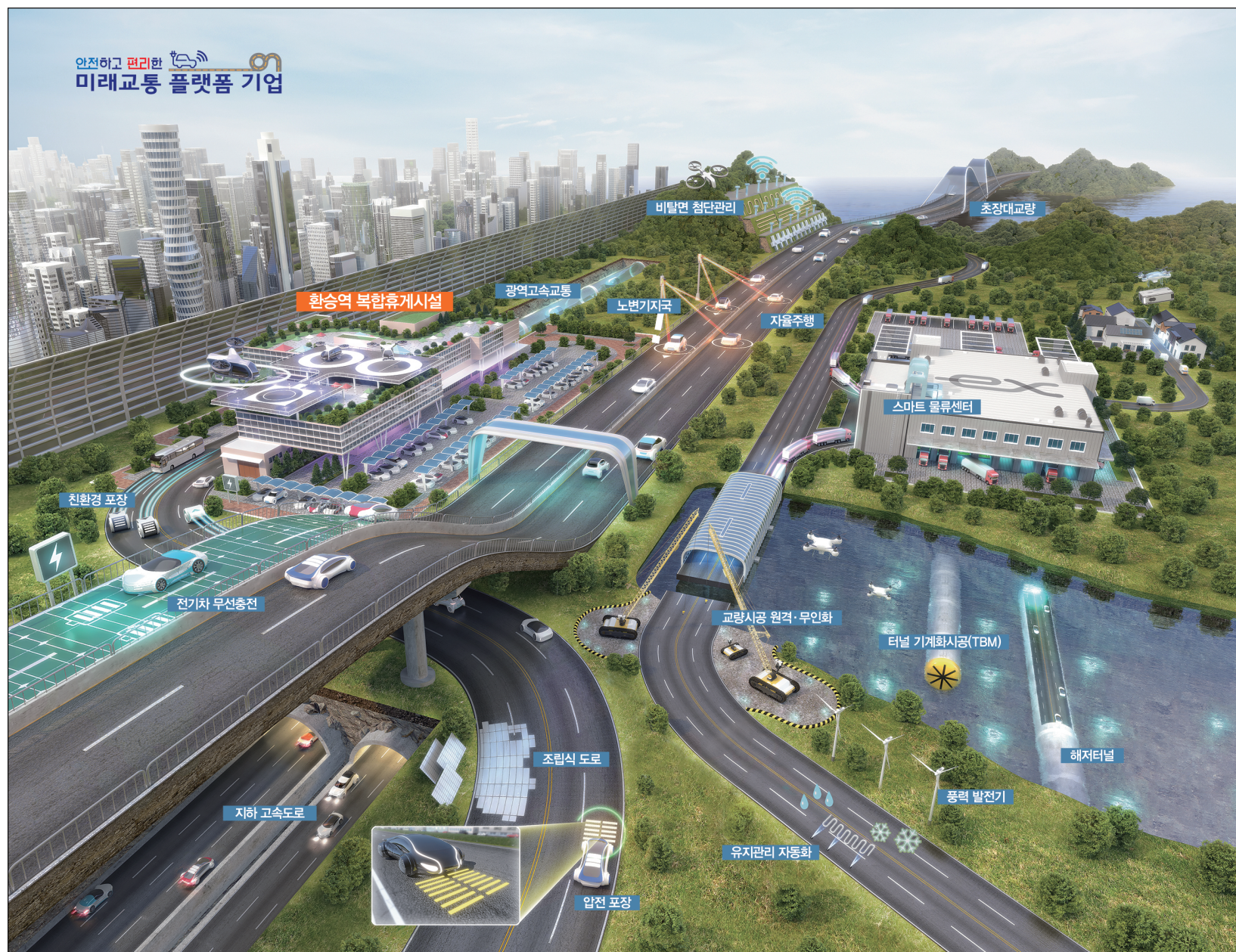
각하 판단을 내린 다수 의견(유남석 소장·이석태·김기영·문형배·이미선 재판관)은 "('검수완박' 입법은) 국회의 입법사항인 수사권·소추권의 일부를 행정부에 속하는 국가기

관 사이에서 조정·배분하도록 개정할 것"이라며 "검사들의 헌법상 권한 침해 가능성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현재는 국민의힘 유상범, 전주혜 의원이 국회 법사위원장을 상대로 제기한 권한쟁의 심판청구는 재판관 5대4 의견으로 일부 인용했다.

입법 과정에서 법사위원장이 민주당 소속이던 민형배 의원이 '위장 탈당' 했다는 사실을 알고도 안전조정위원으로 선임했다는 지적이다.

현재는 다만 국민의힘이 이 법을 가결·선포한 국회의장을 상대로 낸 권한쟁의는 재판관 5대4 의견으로 기각했다. /서울=강병운 기자



고속도로의 스마트한 진화! 한국도로공사가 만들어갑니다

고속도로 디지털화, 복합환승 모빌리티 서비스, 스마트 물류 구축, 고속도로 입체 개발